

이재명 “대장동 의혹, 檢 수사 후 미진한 점 있으면 특검”

대장동 청문회 된 ‘관훈 토론회’
“특검, 수사권 쇼핑위한 꼼수
尹, 특검빙자 수사회피 목적”

‘구속’ 유동규 본부장 질문엔
“휘하에 부정부패 임직원 뒤 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정면돌파를 시도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함께 특검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의 관훈토론회는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초반부터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며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세트 특검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에 대해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화전대 유 대장동 문제와 소위 본인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를 특검하자고 주장 하시는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특검은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윤 후보가 특검을 빙자해 수사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 만능주의적 사고를 하시는 것 같다. 특검이 절대적으로 유능하냐에 우리의 문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 당장 특검을 논의해도 서너 달이 걸리고 대선은 끝난다. 그때까지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앞서 기조연설을 통해 “부동산 관련된 문제 때문에 최근에 특검 이야기가 많이 나와 수없이 많은 질문

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다”며 “당장 야권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요구가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부정비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점들을 아주 오랫동안 스스로 실천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일단은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

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관훈토론회 패널들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질의에 “저에 대해 직접 이야기해 보면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라는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빨리 철저한 수사 통해 진실 드러나면 제가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안타깝고 완벽하지 못해서 부정부패에 오염된 휘하 임직원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저의 부족함과 아쉬움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매우 놀랍고, 매우 실망스럽고 부족함이 있다는 아쉬움을 지금도 갖고 있다. 앞으로 경험 삼아 인사를 배치하고,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해서도 “부패·일탈행위를 한 사람과 통화했다고, 그 사람과 아는 사이라고 배제하면 누가 남겠느냐”며 “본인이 문제가 있다면 판단하고, 문책하고, 나중에 인사에 감안하겠지만 관련이 있어 보인다거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 지나치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른바 ‘욕설 논란’에 대해서도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질문에 “주어진 권한을 자기 이익이나 가족의 이익으로 쓰는 행위는 정말 공적으로 부도덕한 것으로 가족과 다룬 내용이 녹음된 새 사방에 지금도 살아 돌아다니고 있다”며 “많은 상처가 되고, 제가 인격 수양이 많이 부족해서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런 욕설 녹음이 만들어지게 된 점, 제가 욕설한 점 대해서도 한 번 사과드린다. 제 부족함의 소산”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뿐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외교·안보, 기본 소득,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치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국민 주권국가에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 국가공동체 주권자들 삶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며 “리더는 확고한 철학 가치를 갖고, 납득할 만한 합리적 비전을 갖고, 그 길을 제시하고 본인 먼저 가고, 다른 사람들에 용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런 리더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양당 때리는 제3지대... 2030 표심잡기 올인

투표후보 결정한 유권자 52% 불과 48% 미정... 청년층 미결정자 많아
안철수 ‘과학기술 공약’ 차별 강조
심상정 ‘차별금지법’ 이슈선점 앞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서울 수소생산설비업체 엘켄텍을 방문해 수소 제조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0일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도보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심상정 캠프

‘제3지대’에서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높은 지지율을 가져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연일 거대 양당을 ‘정치 기득권’이라고 표현하며 타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아직 후보자를 정하지 않은 유권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에 공세를 취해 반동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뉴스1 의뢰로 엠퍼블리시처가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제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7.0%, 자세한 사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고 말한 응답은 51.5%,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47.5%로 조사됐다. 응답자를 정하지 못한 비율은 18세~29세(69.4%), 30대(68.3%)로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연일 과학기술 행보를 거듭하며 양당 때리기에 나섰다. 대선 출마 이후 1호 공약을 과학기술 공약으로 발표한 안 후보는 의사출신에 벤처 기업 ‘안랩’을 설립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인 대선 후보와 차별점을 강조하고 있다.

안 대표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과학기술과 외교가 한 몸인 시대

에 국내용·내수용 법조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이날 AI 반도체 펌리스 기업 ‘모빌린트’를 방문하기도 한 안 후보는 “과학기술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되고 있다”며 “기득권 양당의 후보들은 아무리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봐도 우물 밖의 세상을 모르는 국내용·내수용 정치인”이라고 단언했다.

심 후보는 10일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도보행진에 참여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대선 후보는 차별금지법 관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두분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음에 하시려거든, 대통령도 다음에 하시길 바란다”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논의되었던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제 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이 후보에게 “재정의 1도 모른다”, 윤 후보에게 “내 슬로건을 표절했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른 대선 후보에 대해 비판을 삼가던 김 전 부총리는 최근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가 초과 세수를 활용하거나, 초과 세수를 이월해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하는데, 그것은 경제 원칙에 맞지도 않는 꼼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자신의 슬로건인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공화국’을 윤 후보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기득권의 나라를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표절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후보에게 이를 검증할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 유권자가 누구를 뽑을지 정하지 않았어도, 그들 중 대다수는 양당 후보에게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10일 본지와 통화에서 “제3지대 후보들 중 어떤 이는 그다음 자신의 정치를 위해 제3지대에 가 있거나, 당선이 안 돼도 자신의 존재감을 갖기 위한 차원일 뿐, 이번 선거는 양자 대결의 최대치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285@

요소수·위드 코로나 등 현안지시 文 대통령, 레임덕 위기 정면돌파

방역·백신·민생경제 등 최선
21일 ‘국민과의 대화’도 예고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문 대통령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내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요소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부동산 등 국내 현안 관련 지시에 이어 국민과 직접 대화까지 예고하면서 문 대통령이 임기 말 레임덕 위기를 직접 돌파하는 모습이다.

임기가 6개월 남은 문 대통령은 최근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를 직접 챙기고 있다. 7박 9일간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5일부터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요소수 수급 문제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두 번에 걸쳐 요소수 문제 관련 대응을 지시했다.

지시 내용은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공공부문 여유분 활용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 ▲해의 물량 확보 위한 외교적 노력 ▲세계 공급망 불안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 점검 및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 관리 ▲수입선 다변화,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과 관련,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방역·백신, 경제·민생’ 등 관련 사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국민과의 대화’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오는 21일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9년 11월 이후 2년 만이다. 300여 명의 국민이 온·오프라인으로 공개 회의인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참여하는 만큼 문 대통령은 주제와 관련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도 지난달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에 대한 차질 없는 전세대출 관리에 대해 지시한 바 있다. 공급 문제와 관련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 동안 관련 기반 마련에 노력 중이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청년 학자금·금융권 대출 채무조정과 함께 최근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한 법과 규정 개선 필요성도 지시했다. 임기 말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레임덕 우려가 불거지자 다양한 국내 현안에 대해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레임덕을 우려해 국내 현안 관련 직접 지시에 나선 게 아니다’라고 한다. 문 대통령이 ‘말년 없는 정부’를 표방한 만큼, 국내외 현안에 대해 꾸준히 챙겨나가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0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임기 말 이든 임기 초든 어떻게 국민 앞에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겠나. 저희들이 국정에 임하는 자세는 부족하지만, 임기 초와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딱딱딱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